2025.7.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22호

고령층의 세대 교체, 다른 노인이 온다
: 고령층의 세대별 학력·노동 이력 비교를 중심으로

정혜윤 부연구위원(인구센터)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22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발행인
김기식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Contents

요 약 | 01
1. 문제 제기 – 같은 나이, 다른 고령자 | 03
2. 청년기 경력 구조의 세대 변화 | 05
3. 고령층의 인식 변화와 노동 지속 동기 | 15
4. 정책 대안 : 고령층정책을 '노후대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해야 | 25

요 약

1. 문제 제기: 같은 나이, 다른 고령자

- 현재 노인일자리는 연간 약 100만 명에게 월 30~40만 원을 지급하는 단기·공익형 중심이며, 참여자의 80%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집중됨.
- 그러나 고령기에 진입하는 세대는 학력과 직업 경험이 다양하고, 자녀가 아닌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
- 생계 기반이 취약한 일부 고령층에 대한 보호성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세대 특성과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

2. 청년기 경력 구조의 세대 변화

- 한국은 1980~2000년대에 걸쳐 청년층의 산업 및 학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음.
- 1981년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의 남성 56.1%, 여성 68.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중졸 이하 학력이 각각 62.5%, 68.1%로 대다수를 차지함.
- 1991년에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제조업 종사 비중이 남성 40.5%, 여성 33.4%로 급증하고, 고졸 이상 학력도 남성 62.8%, 여성 64.5%로 크게 확대됨. 화이트칼라 직종(관리·전문직, 사무직)은 여성 기준 35.9%에서 57.1%로, 남성은 18.5%에서 24.8%로 증가함.
-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보건·교육 등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용 구조가 전환되고, 2025년 현재는 18~34세 경제활동인구 여성의 전문대졸 이상 비중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고학력화가 진행되며, 서비스·지식 산업 중심의 고용 기반이 형성됨.

3. 고령층의 인식 변화와 노동 지속 동기

- 세대별 진입 시기의 학력·산업·직업 구조는 은퇴 전까지 영향을 미치며, 고령층 내부에도 뚜렷한 세대 차이를 남김. 이에 따라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변화하여, 자녀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 삶과 자립적 생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화됨.
- 2023년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진다는 응답은 남성 84.0%, 여성 69.4%로 나타났고, 자녀 지원에 대한 의존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감소함.

4. 고령층의 직업 구조 변화

- 이러한 청년기 경력의 세대 차이는 고령기의 직업 구조에도 반영됨.
- 2024년 현재 고령층의 70대 이상의 경우 여전히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으나, 이는 단순한 연령효과보다는 과거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산업·학력 구조의 영향을 반영한 세대 효과로 해석 가능함.
- 반면 향후 고령층이 될 세대는 산업 고도화, 고학력화, 전문직 종사 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 동일한 단순 일자리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구조적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큼.

5. 정책 대안 : 고령층정책을 '노후대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해야

- 고령층은 이제 더 이상 일률적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산업·경력·학력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노동시장 주체로 재정의되어야 함.
-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2040년 경 약 173만 명의 숙련 인력이 고령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와 경력 연계형 참여 기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산업별 수요 기반의 데이터 구축, 지역 단위 매칭 시스템, 경력 유지형 일자리 설계, 그리고 재교육 및 직무 전환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고령층의 경험과 숙련을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

01 문제 제기 – 같은 나이, 다른 고령자

-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세대, 어린 나이에 산업현장으로 내몰린 세대, 공공근로 조끼를 입고 공원에서 환경미화를 하는 노인을 떠올림.
- 실제로 현재 대표적 노인일자리 사업은 연간 약 100만 명에게 월 30~40만 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단기·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1] 참여자의 80% 이상이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단순 노무에 머물고 있음. 이는 현재 고령자 고용정책이 보호 중심의 제한된 일자리 유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고령층 내부의 변화된 경력과 숙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무엇보다,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처우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만은 아님. 같은 나이라도 새롭게 고령기에 진입하는 세대는 과거와 분명히 다름. 학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직업 경험은 훨씬 다양해졌음.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소득을 마련하려 하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함. 스스로의 삶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짐.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님. 일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
- 물론 생계 기반이 취약한 일부 고령층에 대한 보호성 정책은 여전히 유효함. 그러나 고령자 고용정책이 공익활동 등 특정 형태 중심으로 유지될 경우, 세대 간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제는 고령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고령세대 내부의 세대 교체, 그에 따른 산업 경험과 학력, 인식의 변화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함.

1) 보건복지부.『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무엇보다 고령 세대 내부의 세대교체에 주목해야 함. 청년기의 학력과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업 구조를 경험했는지가 은퇴 이후 경력과 숙련, 고용 형태, 생계 기반을 결정함. 이번 분석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장기 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함.
  - 1981년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첫 해로 자료가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시작한 시점이며, 이후 1991년, 2001년, 2011년은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를 균등한 간격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임. 이를 통해 각 시대 청년세대가 경험한 산업 구조와 학력 수준 변화를 연령 구간별로 스냅샷으로 살펴보고자 함.
- 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같은 나이지만 다른 고령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령자 정책이 세대별 특성을 반영해 다시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함. 또한 본 연구는 코호트 중심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며, 연령 효과와의 구분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보다 종합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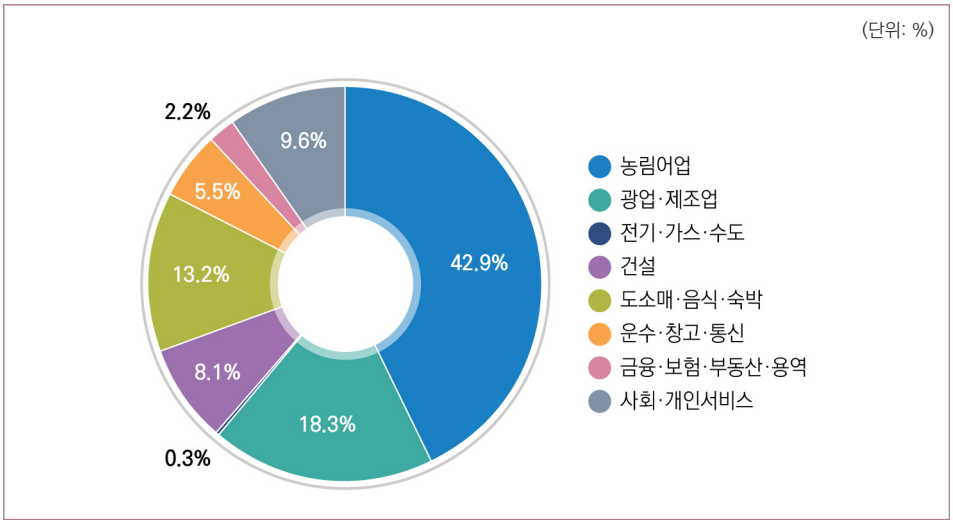
02 청년기 경력 구조의 세대 변화

1981년 스냅샷: 농업 중심, 저학력 진입 세대

• 농업 중심

- 한국은 1960~70년대 산업화를 경험했음.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1년 기준 15~54세 경제활동인구[2]의 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여전히 높았음.
- 남성의 경우 15~54세 경제활동인구의 42.9%가 농림어업에 종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여성도 70.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음. 광업·제조업 종사자는 남성은 18.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여성은 도소매·숙박업(11.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10.5%)을 차지했음.

그림1
1981년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15~5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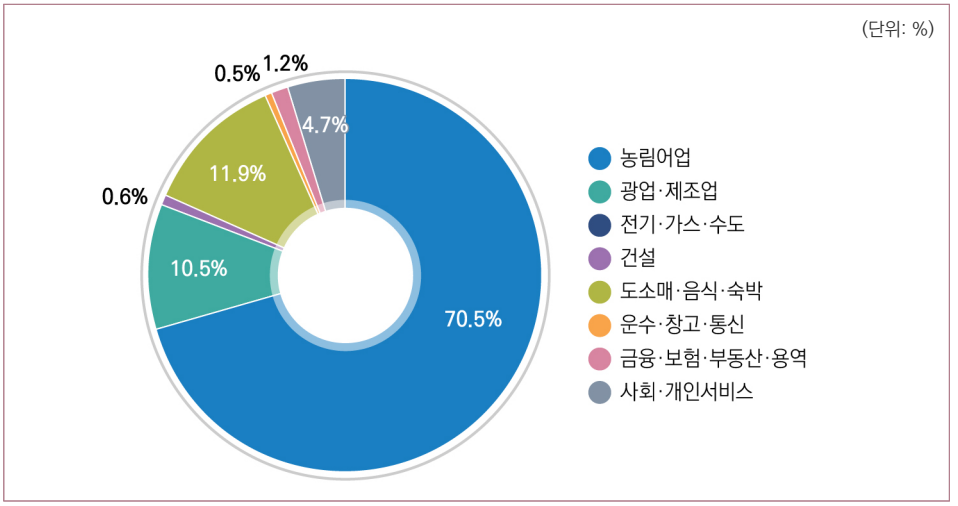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2) 본 분석은 고령기 진입 이전의 산업 구조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15~54세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설정함.

- 산업화가 빠르게 추진되었음에도 높은 농촌 인구 비중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을 시사함. 특히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이동이 상대적으로 70년대까지는 더디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2
1981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15~54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 본격적 산업화 전환기의 청년층[3]의 산업·학력 구조 특징

- 그러다 보니 15~29세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종사자 분포에서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29세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56.1%, 여성의 경우 68.7%가 농림어업에 종사했음. 광업·제조업 종사자는 각각 19.0%, 14.5%에 그쳐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음.
- 15~29세 경제활동인구의 최종 학력도 남성과 여성 모두 중졸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했음. [표 2]는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당시에는 저학력 인력이 중심이었음을 보여줌.
- 즉,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일부 연령층과 그보다 앞선 세대는 이러한 산업 구조와 저학력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이후 중장년기까지 농업·영세 자영업 중심의 경로로 이어져 현재 고령층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음.

3) 시기별 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청년층 연령대를 구분함. 2000년대 이전에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낮고 조기 노동시장 진입자가 많았기 때문에 15~29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는 대학 진학이 일반화됨에 따라 실제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어져 18~34세 구간을 중심으로 분석함.

표1
1981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종사자 구조 (15~29세)

(단위: %, (천명))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	사회·개인서비스	전체
남성	56.1	19.0	0.2	4.9	8.8	3.8	1.5	5.6	100 (19,961)
여성	68.7	14.5	0.1	0.4	7.7	0.9	1.7	6.1	100 (20,9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표2
1981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최종 학력 분포 (15~29세)

(단위: %, (천명))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전체
남성	62.5	33.0	1.6	2.9	100(19,961)
여성	68.1	28.5	1.4	2.0	100(20,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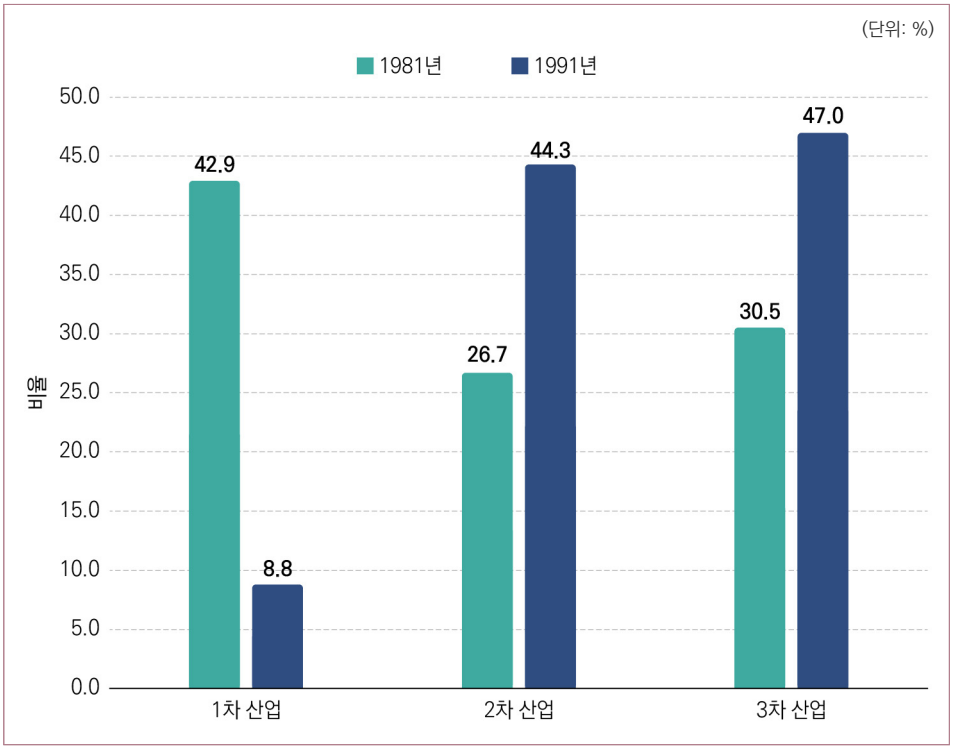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1991년 스냅샷: 제조업 중심, 학력의 상승

- **제조업 중심과 여성의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이동 경향**
  - 1980년대, 1981년과 1991년 불과 10년 사이에 한국의 산업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했음.
  - [그림 3],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림·어업·임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던 15~54세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우 42.9%에서 8.8%로 34.1%p, 여성의 경우 70.5%에서 11.5로 59%p가 급감했음.
  - 반면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 등 2차 산업 종사자는 남성의 경우 26.7%에서 44.3%로, 여성의 경우 11.1%에서 32.3%로 2~3배 크게 증가했음.
  - 3차 산업 종사자도 크게 늘어나 1991년 남성의 경우 3차 산업 종사자가 15~54세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이르렀음. 여성의 경우 역시 1981년 18.3%에서 56.1%로 3배 이상 급증해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는 1980년대 불과 단 10년 사이에 한국 산업이 농업 중심 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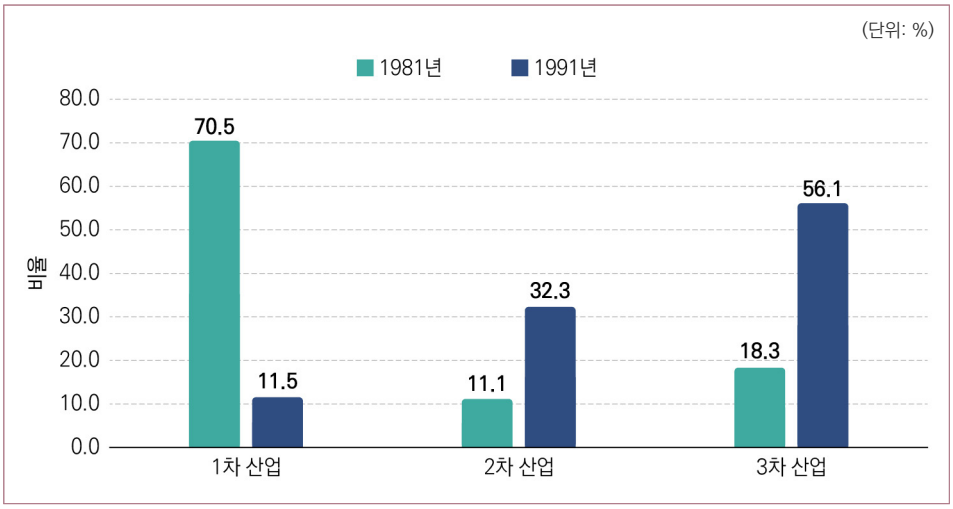
- 특히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층 종사자의 세부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15~29세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40.5%, 여성의 33.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압도적인 업종임. 농업 중심 구조에서 제조업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줌.
- 또한 여성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도소매·음식·숙박업(24.5%)과 사회·개인·서비스업(25.9%)에서 남성보다 각각 5~7%p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이는 여성 청년층이 남성에 비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업이 이동했음을 시사함.

그림3
1981년 vs 1991년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종사자 비교 (15~54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1991년)

그림4
1981년 vs 1991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종사자 비교 (15~54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1991년)

- 아울러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1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경우 50.2%, 여성의 경우 52.7%가 고졸자가 분포할 정도로 학력이 신장됨. 1981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60% 이상이 중졸자였던 것과 대비됨.
- 청년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전문대 대졸자 모두 198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가령 1981년 대졸자가 남녀 모두 2% 수준이었다면 1991년에는 7~8% 수준에 이름. 특히 1981년만해도 여성의 학력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1991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1991년 청년층인 1차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중심 세대는 과거 세대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음.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제조업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히 생산직만 늘어난 것만은 아님. [표 5]에서 보듯이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청년층에서는 전문·관리직 비중이 남성은 3.0%에서 5.4%로 2.4%p, 여성은 4.9%에서 13.1%로 8.2%p 늘었음. 사무직도 남성은 15.5%에서 31%로 15.5%p, 여성은 19.4%에서 44%로 24.6%p 크가 증가해 화이트칼라 직종 비중이 동반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표3
1991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종사자 구조 (15~29세)

(단위: %, (천명))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	전체
남성	4.8	40.5	0.4	10.3	19.7	5.8	6.2	12.4	100 (36,119)
여성	2.3	33.4	0.2	2.3	24.5	2.4	9.1	25.9	100 (31,3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1년)

표4
1991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최종 학력 분포 (15~29세)

(단위: %, (천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남성	37.1	50.2	4.4	8.2	100(69,852)
여성	35.5	52.7	4.7	7.1	100(75,6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1년)

표5
1981년과 1991년의 청년 임금근로자의 직업 분포 비교 (15~29세)

(단위: %, (천명))

	1981년 남성	1981년 여성	1991년 남성	1991년 여성
관리자·전문가	3.0	4.9	5.4	13.1
사무	15.5	31.0	19.4	44.0
판매·서비스	12.1	19.5	16.4	17.3
농림·축산·수산업·수렵업	4.8	1.9	0.8	0.2
생산	13.9	26.4	8.9	12.5
운수	22.6	8.9	26.8	9.0
단순노무	28.0	7.4	22.4	4.0
전체	100(7,566)	100(5,357)	100(29,319)	100(25,604)

주: 임금근로자에 한정한 결과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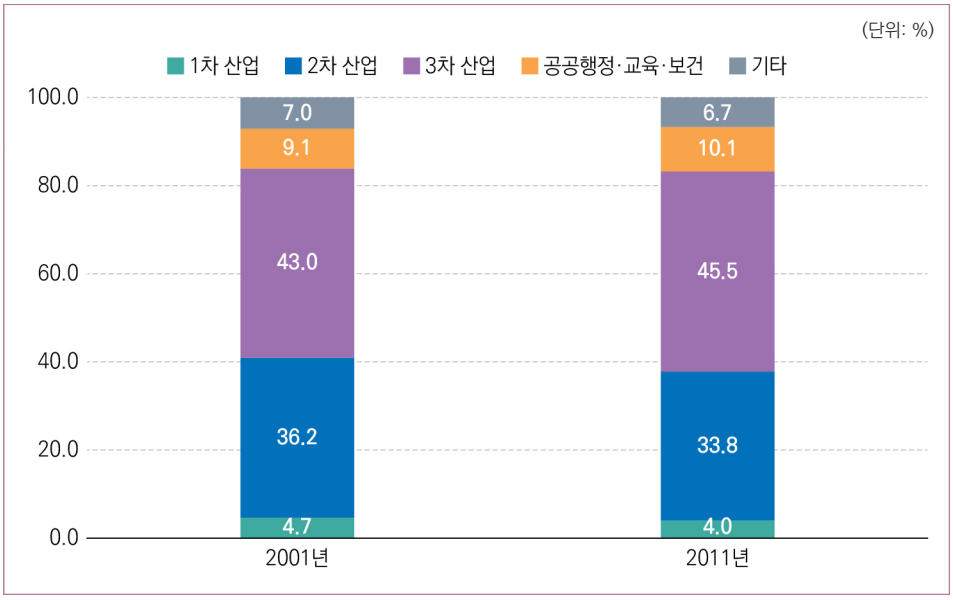
-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학력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화로 볼 수 있겠음.
- 이 시기 청년층은 제조업·서비스업과 고졸 기반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음. 제조업 숙련과 사무직·관리직 경험은 은퇴 시점까지 이어져 현재 고령층 내부의 세대적 차이를 규정할 것임.

2001년과 2011년 스냅샷: 새로운 산업 분류의 등장

• 새로운 3차 산업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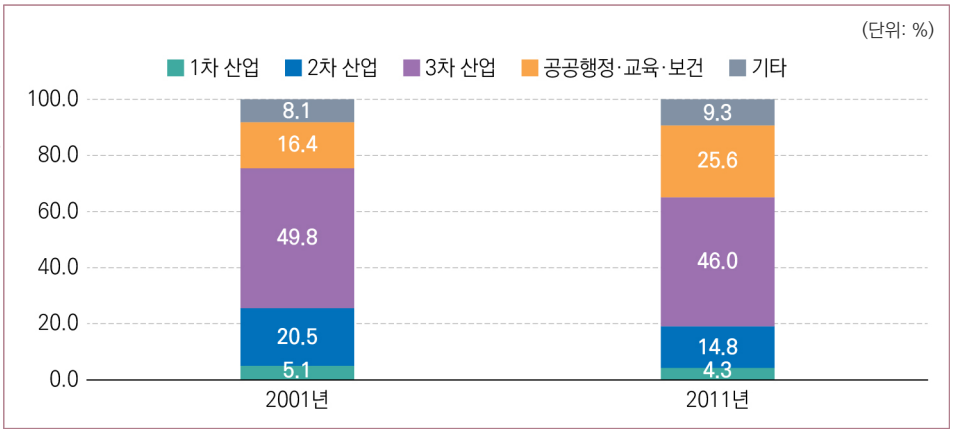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3~1999년, 2000~2003년, 2004~2011년에 걸쳐 산업분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했음.
- 특히 기존에는 3차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예술·스포츠 등 여가관련 사업·협회 및 단체 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가 단계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15~54세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줌. [그림 5]. [그림 6]에서 보듯이 기존에 3차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새로운 3차 산업 종사자가 남성은 2001년 16.1%, 2011년 24.5%로 늘어났고, 여성은 2001년 16.8%에서 2011년 34.9%로 크게 늘어남.

그림5
2001년 vs 2011년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종사자 분포 (15~54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1년, 2011년)

그림6
2001년 vs 2011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종사자 분포 (15~54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1년, 2011년)

- 특히 여성의 경우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2001년에는 16.4%, 2011년에는 25.6%에 이르는 등 눈에 띄게 증가함[그림 6].
- 이들 업종은 2011년 여성의 경우 단일 산업군으로도 도소매·판매업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등 일반서비스 업 및 공공·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과 2011년 청년층으로 경제활동인구에 진입한 세대는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전문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높아진 반면, 중졸자는 크게 감소함. 1991년 18~34세 경제활동인구 중 중졸자는 남성 20.2%, 여성 26.7%였으나 2001년에는 모두 한 자릿수로 줄고, 2011년에는 여성 4.7%, 남성 5.6%에 불과함.
- 같은 기간, 남성의 전문대 졸업 비중은 6.2%에서 16.7%로 10.5%p 증가하고, 여성은 5.1%에서 23.5%로 18.4%p 확대됨. 남성의 4년제 대졸 이상 비중은 12.9%에서 27.0%로 14.1%p 상승하고, 여성은 8.4%에서 28.4%로 20.0%p 증가함.
-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합산할 경우, 남성은 1991년 19.1%에서 2011년 43.7%로, 여성은 13.5%에서 51.9%로 각각 24.6%p, 38.4%p 상승함.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률의 비약적 확대가 확인됨.
-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특히 새로운 3차 산업으로의 종사 비중이

커졌음. 이들 세대는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 후반, 밀레니얼 초입 세대에 해당함.

-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아지며 제조업 중심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산업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진출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

표6
1991년 vs 2001년 vs 2011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학력 구조 변화 (18~34세)

(단위: %, (천명))

	학력단계	1991년	2001년	2011년
남성	중졸 이하	20.2	8.3	5.6
	고졸	60.6	61.7	50.7
	전문대졸	6.2	11.1	16.7
	대졸 이상	12.9	19.0	27.0
전체		100(79,569)	100(76,361)	100(67,736)
여성	중졸 이하	26.7	7.0	4.7
	고졸	59.9	62.1	43.4
	전문대졸	5.1	14.5	23.5
	대졸 이상	8.4	16.4	28.4
전체		100(85,365)	100(81,560)	100(69,281)

주: 1991년 학력 또한 2001년, 2011년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령범위(18~34세)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1년, 2011년)

- [표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업 구조는 특히 여성의 경우 관리자·전문가(33.3%), 사무직(35.6%), 서비스·판매직(23.3%) 등 특정 직업군에 90% 이상이 몰려 있을 정도로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음.
- 이는 특히 새로운 3차 산업(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서비스 등)에서 여성 일자리가 대거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즉,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직업 구조는 전통적인 농업·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학력 기반의 전문직과 서비스직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음을 시사함.[4)]

4) 2001년과 201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49.4%, 49.8%로, 전체 여성 인구의 구조 변화가 아닌,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내부의 직업 분포 변화에 국한됨. 해석 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이 시기 청년층은 다양한 3차 산업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진입했음. 향후 이 세대는 고령기에 접어들 때까지 서비스·전문직 중심의 경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표7

2001년 vs 2011년 청년 임금근로자의 직업 분포 비교 (18~34세)

(단위: %, (천명))

	2001년 남성	2001년 여성	2011년 남성	2011년 여성
관리자·전문가	21.7	24.2	23.3	33.3
사무	16.6	34.2	20.0	35.6
서비스·판매	17.4	29.1	20.7	23.3
농림·수산업·수렵업	0.3	0.1	0.3	0.0
기능	16.3	3.0	10.0	0.9
장치·기계·조립	15.9	3.3	12.7	2.2
단순노무	11.8	6.1	13.1	4.7
전체	100(52,945)	100(48,646)	100(46,597)	100(42,808)

주: 임금근로자에 한정한 결과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1년, 1991년)

03 고령층의 인식 변화와 노동 지속 동기

◉ 노후 인식, 같은 나이, 다른 생각

• 노후 인식

- 이처럼 세대별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의 학력, 산업, 직업구조는 은퇴 직전까지 이어져 현재 고령층 내부에도 뚜렷한 세대의 차이를 남기고 있음.
- 따라서 실제로 이 차이가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식과 일·자녀관에 대한 인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식은 가족 의존에서 스스로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됨. 이러한 변화는 고령 세대 내부에서도 성별·세대별 차이를 드러냄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고령층(60세 이상)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조사인 2011년은 주로 1951년생 이전 출생자가 포함되어 전형적인 산업화 초기세대이자 농촌 출신이 다수로, 저학력·저소득 경로의 비중이 큼.
- 반면 가장 최신 조사인 2023년 사회조사는 1963년 이전 출생자가 포함되어 후기 산업화 세대인 1차 베이비부머가 다수 포함됨. 상대적으로 고졸자가 많고 공업화·도시화 경험자가 늘어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이 다름.

생활비 마련 구조의 변화

• 스스로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중고령자

- 2011년과 2023년의 60세 이상 중고령자를 비교하면 불과 12년 만에 생활비 마련 방식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74.1%에서 84%로 약 10%p, 여성은 49.4%에서 69.4%로 20%p 상승함. 반면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남성이 20.3%에서 6.1%로 14.2%p, 여성은 41%에서 16.9%로 무려 24.1%p 감소함. 가족에 대한 의존은 줄고 스스로 소득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
- 그렇다면 고령층이 스스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8
60세 이상 중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2011년 vs 2023년)

(단위: %, (천명))

	년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마련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정부 보조 등)	기타	전체
남성	2011	74.1	20.3	5.4	0.2	100 (3,377)
	2023	84.0(↑)	6.1(↓)	9.8(↑)	0.1(↓)	100 (6,059)
여성	2011	49.4	41.0	9.4	0.2	100 (4,422)
	2023	69.4(↑)	16.9(↓)	13.6(↑)	0.1(↓)	100 (7,25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1년, 2023년)

• 근로소득이 중요한 소득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할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통해 마련한다는 비율이 2011년과 2023년 12년 사이에 남성은 54.8%에서 61.3%로 6.5%p, 여성은 46.4%에서 54.2%로 7.8%p가 증가함. 이는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의존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스스로 소득을 책임지려는 흐름은 가족관에도 변화를 만들어 냄. 특히 자녀와의 동거 의향은 고령층의 독립 의지와 맞닿아 있음.

표9
60세 이상 중고령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2011년 vs 2023년)

(단위: %, (천명))

	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퇴직금	예금	기타	전체
남성	2011	54.8	11.6	26.6	7.1		100 (2,504)
	2023	61.3(↑)	6.9(↓)	28.0(↑)	3.5(↓)	0.2	100 (5,091)
여성	2011	46.4	13.4	28.8	11.4		100 (2,186)
	2023	54.2(↑)	9.3(↓)	30.1(↑)	6.1(↓)	0.3	100 (5,03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1년, 2023년)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 향후 자녀 동거 희망 비율도 감소

-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남성은 25.7%에서 19.4%로 6.3%p, 여성은 31.6%에서 22.8%로 8.8%p 줄어들어 인식 변화가 나타남.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며 돌봄 받는' 전통적 모델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표10
60세 이상 중고령자 향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 (2011년 vs 2023년)

(단위: %, (천명))

	년도	동거 희망	희망하지 않음	전체
남성	2011	25.7	74.3	100 (3,377)
	2023	19.4(↓)	80.6(↑)	100 (5,724)
여성	2011	31.6	68.4	100 (4,422)
	2023	22.8(↓)	77.2(↑)	100 (6,92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1년, 2023년)

- 청년기 학력이 더 높고 직업이 상대적으로 화이트칼라였던 층이 독립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추론됨.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활동이 늘어난 것이 자녀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는 흐름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가족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고령층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함.

일에 대한 인식과 기대

- 따라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임. 남성은 2005년 경에도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근로를 희망했고, 최근 2024년에는 77.6%까지 상승함. 여성의 경우 2005년 47.3%에서 2024년 61.8%로 14.5%p가 수직 상승함. 이는 고령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통해 소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해가 갈수록 강화됨을 보여줌[표 11].

표11
55세 이상 중고령자 향후 근로 희망 여부 (2005년 vs 2015년 vs 2024년)

(단위: %, (천명))

	년도	근로 희망	희망하지 않음	전체
남성	2005	73.1	26.9	100 (3,578)
	2015	74.5	25.5	100 (5,565)
	2024	77.6	22.4	100 (7,695)
여성	2005	47.3	52.7	100 (4,300)
	2015	49.4	50.6	100 (6,242)
	2024	61.8	38.2	100 (8,2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05년, 2015년, 2024년)

- 같은 연령 고령층이라도 청년기 학력과 경력이 노후의 소득·가족관계·근로 의향까지 차이를 만들어냄. 이는 획일적 노인 정책에서 벗어나 세대별·경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이는 실제 현재 고령자 직업구조를 봐도 잘 드러남.

고령자 직업구조 변화와 세대 효과

• 현재 중고령자들의 직업 분포는?

- 2024년 고령층 직업 분포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순노무직(임금근로자 기준)과 농림·어업 종사자(전체 경제활동인구 기준)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표 12],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55~59세에서 임금근로자 직업 분포의 13.7%에 불과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68.2%로 다섯 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짐.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남성은 55~59세의 4.4%에 불과했으나, 70세 이상에서는 32.7%로 연령대별 차이가 큼.
- 여성 역시 같은 기준에서 단순노무직은 55~59세에 22.8%, 70세 이상은 78.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며,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도 4.5%에서 24.7%로 차이가 큼.

표12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2024년)

(단위: %)

연령	남성	여성
55-59세	13.7	22.8
60-64세	22.6	35.5
65-69세	37.7	49.8
70세 이상	68.2	78.7

주: 임금근로자에 한정한 결과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24년)

표13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2024년)

(단위: %)

연령	남성	여성
55-59세	4.4	4.5
60-64세	10.1	9.1
65-69세	16.8	15.3
70세 이상	32.7	24.7

주: 전체 경제활동인구(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기준으로 산출한 결과값임. 이는 농림어업 고령자 다수가 자영업 또는 가족종사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 통계상 임금근로자만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규모가 과소평가되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24년)

-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연령 효과로만 해석하기 어려움. 1981년 청년기 스냅샷을 보면,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청년기였던 시기에 농업 종사자와 저학력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았음. 당시 남성은 농업·기계·기능직 중심 산업에, 여성은 농업과 제조보조·가내생산 등 비공식 부문에 다수 종사하고 있었음.
- 결과적으로 현재 고령층의 단순노무직·농림어업 집중은 당시 세대가 지닌 저학력·농업·기능직 중심 구조가 고령기까지 이어진 세대 효과임을 시사함.
- 1981년 청년층의 산업 및 학력 구조와 현재 고령층 직업 분포 간 유사성이 관찰됨.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 구조가 이후 고령기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는 순환논리가 아니라,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 구조와 학력·경력 특성이 노후의 고용구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 다만, 고령기 직업 구조는 청년기 진입 구조뿐 아니라 중년기 이후의 산업·직업 전이 과정을 함께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 본 연구는 시계열 단면자료를 활용해 구조적 차이를 추정한 것으로, 세대별 일자리 이동 경로를 직접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점은 본 연구 해석에 있어 전제로 고려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 진입 구조가 고령기 직업 분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됨.
- 그러므로 현재 고령층의 직업구조는 과거 청년기 경로의 누적적 결과이자, 미래 고령층 노동시장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울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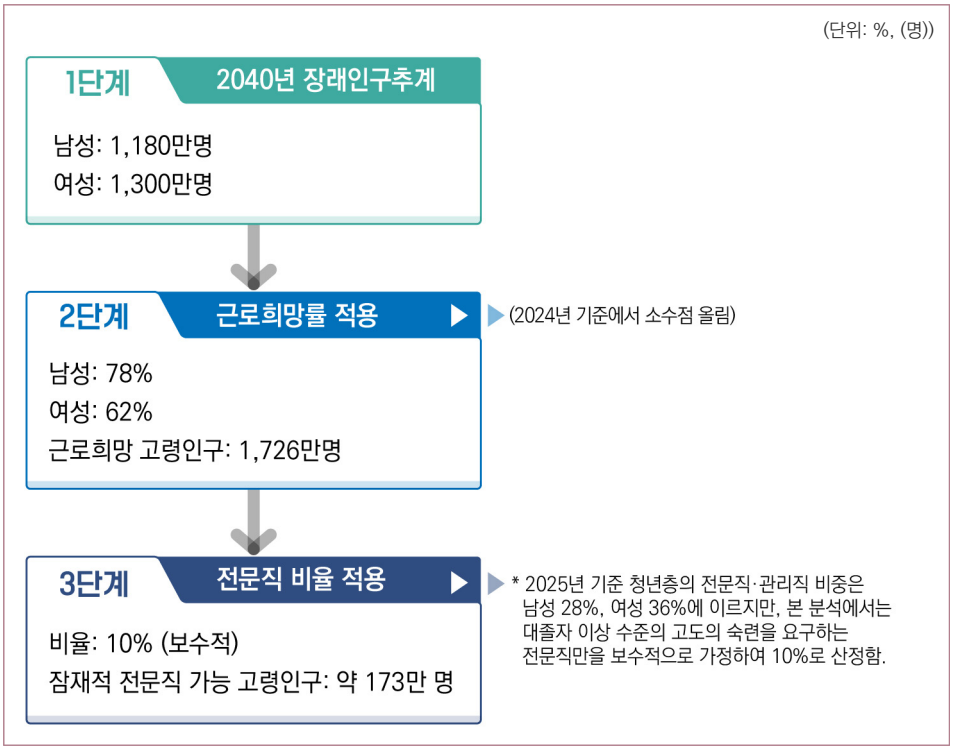
2001년·2011년 청년기 구조가 2040년 고령층으로 이어진다면?

• 2040년, 반복될 노동시장 구조적 미스매치의 가능성

- 지금의 고령층 직업구조는 단순한 연령 효과가 아니라, 청년기 학력·산업 진입 구조와 경력 경험이 고령기까지 이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 마찬가지로, 2001년과 2011년 청년기 경험을 가진 세대들도 앞으로 2040년 고령층이 될 때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이들 세대는 고학력·전문직 비중은 높아졌지만, 장기적 불안정 고용과 경력단절 위험이 커졌다는 점에서 경력 미활용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근로희망률과 전문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해보면, 2040년에도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잠재적 고령 인력은 최소 170만 명 으로 추산됨[그림 7].
- 현재처럼 100만 명 내외 고령층에게 단순 공공일자리만 제공하는 단기 대책으로는 이들의 경력과 숙련을 전혀 살릴 수 없음. 결국 지금과 같은 단순·단기 중심 정책이 유지된다면, 2040년에도 경력과 숙련이 사장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금 중장년층부터 경력과 숙련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중장기 노동시장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 나아가 이러한 과제의 긴급성은 현재 청년층의 산업 분포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그림7 2040년 고령층 전문직 잠재 가능 인력 단계별 추정 시나리오 산업 종사자 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2025년)

2025년 청년층은?

• 2025년 청년층의 산업 분포는?

- 2025년 현재 청년층 산업구조를 보면,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음. 2001년과 2011년을 스냅샷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노동시장은 제조업 비중이 점차 줄고, 서비스·공공·지식산업으로 중심축이 옮겨 왔음.
- 이 흐름은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 현재 청년층에서 더욱 뚜렷해져, 남성의 경우 광업·제조업 비중은 20.9%에 머물러 있는 반면, 도소매·숙박·음식(22.7%), 정보통신·금융·보험·부동산(9.9%), 전문·시설관리(13.3%), 공공행정·교육·보건(13.2%) 등 서비스·지식산업과 공공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 청년층은 이 경향이 더 두드러져, 제조업 비중은 8.1%에 불과하고 도소매·숙박·음식(26.3%), 공공·교육·보건(32.5%), 정보통신·금융·보험·부동산(10.9%) 등으로 3차산업이 사실상 주력 고용 기반이 되고 있음. 변화한 것은 산업 구조만이 아님.

표14
2025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18~34세)

(단위: %, (천명))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창고	정보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전문· 시설관리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전체
남성	0.9	20.9	0.9	6.1	22.7	5.9	9.9	13.3	13.2	6.1	100 (16,766)
여성	0.6	8.1	0.3	1.3	26.3	2.4	10.9	10.2	32.5	7.4	100 (15,62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25년)

• **2025년 청년층의 학력은?**

– 청년층의 학력 역시 높아졌음. 2025년 기준 청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전문대졸·4년제 졸 합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성은 전문대졸 이상 비중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학력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표 15].

표15 2025년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학력 구조 (18~34세)

(단위: %, (천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남성	3.0	48.8	13.5	34.7	100(25,959)
여성	2.8	36.3	17.8	43.1	100(24,765)

주: 2023년 교육통계(KOSIS 기준)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약 76.2%에 달하지만 18~34세 대졸 이상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재학생·졸업유예·장기 취업준비생 등으로 실제 경제활동에 진입하지 않는 청년층이 여전히 많고, 특히 여성은 30대 초반부터 조기 경력단절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가 제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5년)

• **2011년과 2025년의 같은 직업, 다른 학력**

– 또한 [표 16]을 보면 2011년과 2025년 사이 직업 분포 자체는 큰 구조적 변화가 없었지만, 각 직업군의 학력 속성은 분명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같은 관리자·전문가 직군이라도 2025년 청년층의 4년제 대졸자 비중은 남성이 2011년 54.7%에서 72.6%로 17.9%p, 여성은 50%에서 71.2%로 21.2%p 늘어남. 사무직도 남성은 53.5%에서 61.9%로 8.4%p, 여성은 39.1%에서 59.8%로 20.7%p 상승해 특히 여성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일반적으로 학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 판매·서비스직조차 남성은 15.2%에서 22.9%로 7.7%p, 여성은 8.6%에서 24.6%로 16%p 늘어 직업군 전반이 고학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산업구조가 디지털화·AI 기술로 고도화되면서 직무별 숙련과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음.

표16
2011년 vs 2025년 청년층 주요 직업의 대졸자 비율 (18~34세)

(단위: %)

	2011년 남성	2025년 남성	2011년 여성	2025년 여성
관리자·전문가	65.7	72.6	50	71.2
사무직	53.5	61.9	39.1	59.8
판매·서비스	15.2	22.9	8.6	24.6

주) 임금근로자에 한정한 결과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년, 2025년)

- 특히 이러한 청년층의 고학력화는 단순한 학력 상승에 그치지 않음. AI 기술 발전, 디지털 전환, 서비스산업과 IT 기반 산업의 확장 등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청년층에게 더 높은 전문성·기술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동일한 직업군이라도 과거보다 학력·숙련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국 이러한 청년층의 학력·직업 속성 변화는 AI·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는 향후 고령층의 역할과 일자리 속성을 크게 바꿔 놓을 것임. 이들이 고령자가 될 시점에 기존의 단순 노인복지나 생계보조 중심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따라서 과거의 '저학력·저숙련 노동자'를 전제로 한 노인 정책 틀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음.
- 앞으로는 고학력·전문성·경력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고령층을 전제로,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경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함. 즉, 미래 세대의 고령기에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며 경력을 지속하고,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됨.
- 고령층을 여전히 보호대상 중심으로만 보는 시각은 한계에 다다름. 청년기에 진입한 산업·직업·학력 구조가 달라진 만큼 고령층 내부는 더 이상 단일집단이 아님.
- 고령층의 질적 구성이 더욱 다양하고 고급화될 것으로 단순 노후생계 대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 앞으로 고령노동시장은 경력과 숙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중장기적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함.

04 정책 대안 : 고령층정책을 '노후대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해야

• **첫째, 경력과 숙련을 이어가는 맞춤형 일자리 설계**

- 퇴직한 고령 인력이 보유한 학력과 경력, 숙련도를 산업과 지역사회가 끊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령 2040년 경 약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도의 전문직 고령 인력은 컨설팅·멘토링·현장 자문 등 경력 유지형 일자리로 연계해야 함.
- 반면 단순노무·영세자영업 경력자는 안정적 소득 기반과 숙련 전환 기회를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해야 함. 이를 통해 고령층이 더 이상 단순·단기 일자리만 반복하지 않고, 축적된 숙련이 사회 전반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지역·산업 기반의 활용 시스템 마련**

- 산업별·직종별로 고령 숙련인력을 파악하고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구축과 매칭 시스템이 필요함.
- 지역 내에서 고령 인력이 돌봄·서비스 등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연계망을 강화해야 함.

• **셋째,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고령노동시장 변화는 단기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2040년 이후까지의 세대·산업별 숙련 구조와 경력 흐름을 반영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교육·재교육·직무 전환 지원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영역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포함이 필요.

• **결론**

- 다만,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저숙련·저임금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이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경쟁 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는 특성이 존재함. 따라서 숙련과 경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구조 개편과 병행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내부의 세대 교체와 경력 특성의 다양화는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기존 정책 구조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함.
- '같은 나이, 다른 고령자'를 전제로 더 이상 단일한 노후대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
-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민간형과 역량활용형 일자리를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업량의 약 60%가 공익형에 집중되어 있어,[5] 고령층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앞으로는 고령층의 경험과 숙련이 단순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할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함. 특히 기술 변화와 산업 혁신에 맞춰 경력과 숙련이 적시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맞춤형 설계와 단계별 실행, 그리고 중장기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

5) 남기철(2025), "노인 사회보장과 공익활동 지원", 「고령사회의 삶과 일」, 19호, p.13.

참고문헌

남기철(2025), “노인 사회보장과 공익활동 지원”, 「고령사회의 삶과 일」, 19호, pp.8-13.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통계청(1981, 1991, 2001, 2011, 202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05, 2015,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2013, 2023) 사회조사.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ISSN | 2733-8258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